

경사노위 참가가 아니라 대정부 투쟁을 해야 한다

문재인은 새해 들어 보름 만에 기업인 회동을 두 번이나 했다. 기업 프렌들리다. “올해는 경제에서 성과를 보여야 한다.” “기업의 경쟁력도 좋은 일자리도 모두 결국은 투자에서 나온다.”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기업 지원, 임금 억제, 규제 완화를 강하게 추진한다.

그런데 정부가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탄력근로 기간 확대안은 일자리 늘리기에 역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실천 사이의 이런 모순은 기업 지원에 확고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생긴다.

12년 전 이명박도 기업 총수들을 만나 비즈니스 프렌들리(기업 친화) 정부를 약속하며 비슷한 말을 했다. “일 자리는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 밖에 없다.”

문재인은 10일 신년사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말했지만, “혁신”이라는 단어를 21번 말할 동안 “포용”은 9번만 말했다. 성장(자본 축적)과 복지 사이의 우선순위가 드러난 것이다.

“경제”(36회), “성장”(29회), “기업”·“산업”(각 8회), “투자”(7회) 등을 반복해 언급한 반면, “노동자”와 “최저임금”은 딱 1번씩 언급했다. 그나마 최저임금은 자영업자의 고충을 해결해 준다는 문맥에서 나왔다. “김용균”은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1월 15일 문재인과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KT 황창규, SK 최태원, 현대차 정의선, 삼성 이재용 등은 모두 정부에 규제 완화와 투자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들 모두 박근혜에게 뇌물을 준 혐의자였다. 뇌물죄 대법원 판결을

2018년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난 뒤

**1월 19일,
청와대 만남**

➔

- 2월, 근로기준법(주52시간제) 개악
- 2~4월, 한국GM, 조선업 구조조정
-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 허울뿐인 공공부문 정규직화
- 전교조 법외노조 해결 거부
- '혁신 성장' 강조
- 의료 영리화 추진

**7월 3일,
비공개 면담**

➔

- 9월, 규제프리존법 통과
- 9~11월, 잡월드 노동자 투쟁
- 12월, 발전 노동자 김용균 씨 죽음과 투쟁
- 12월, 제주영리병원 허용
-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
- 최저임금 차등 적용 추진,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개악
- 광주형 일자리
- 친기업 행보 가속(규제 완화, 기업 지원 약속)

앞둔 이재용은 이날 문재인에게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문재인은 새 대통령 비서실장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오래 있었고 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산업 정책에도 밝고, 그 분야 인사들과 충분히 교류할 수 있는” 노영민을 임명했다.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문이 인천공항 비정규직이라고 자랑했었다. 그러나 그때 이미 “기업 부담”을 핑계로 노동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라고 했었다.

반면 기업인 친구들에게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다. 기업주들이 수조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배자, 결정권자이기 때문이다.

경제 전망 악화

한국 경제는 지난해부터 투자가 급감하고 성장률이 둔화하고 고용 상황이 나빠졌다. 2017년보다 2018년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인데, 2019년 올해는 전망이 더 나쁘다.

무엇보다 세계경제 전망이 상당히 어두운데, 한국 경제는 이로부터 악영향을 받을 것 같다. 신흥국의 연쇄 외환위기, 중국 경제 성장 둔화, 미·중 무역전쟁 격화 등이 큰 요인이다.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제일 강대국 지위를 지키려는 것이므로 경제적 경쟁뿐 아니라 지정학적 갈등도 심화시키고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역시 미국과 중국 간 제국주의 갈등으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자, 문재인 정부는 친기업 행보를 더 노골화했다. 자칭 “노동 존중” 정책들은 후퇴했거나 실체가 드러났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노동기본권 문제가 대표적이다. 또, 일자리 정부를 표방해 놓고는 노동자들을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박근혜가 못 다한 의료 영리화와 민영화 추진하고, 국민연금 개악안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개혁은 한국 자본주의의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는 개혁이다. 지금처럼 경제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만족할 만한 개혁을 제공하기 어렵고 그럴 의사도 없다. 문재인은 괜찮은데 경제 관료가 문제라는 일각의 주장은 그저 희망 사항일 뿐이다.

2019년에는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이 더 본격화할 것이다. 그리고 이 중에 많은 것이 경사노위에서 추진될 것이다.

첫째, 임금 억제와 노동시간 유연화: 직무급, 광주형 일자리 등. 탄력근로제는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낳는 동시에 임금 삭감 공격이기도 하다. 둘째, 최저임금, 비정규직 개악. 셋째, 구조조정: 일부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남은 노동자들에게는 조건 악화와 생산성 협조를 강요할 것이다.

문재인에 대한 태도

문재인 지지율은 1년 반 만에 반토막이 났다. 그러자 우파가 사기를 회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를 우파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애초 문재인 지지율 하락이 진보 염원을 저버린 탓임을 생각하면, 이런 주장은 대중을 무장해제시키는 일일 뿐이다.

우파 정당들이 반사이익을 얻는 것이 현실의 전부가 아니다. 노동자들의 불만이 증가했다. 일부는 투쟁에 나섰다. 노동운동은 문재인을 유보 없이 비판하고,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김명환 집행부가 내놓은 사회대개혁 프로그램은 문재인 정부와 협력해서 개혁을 이룬다는 것이다.

▶ 뒷면으로 이어짐

경사노위 참가가 조합원들에게 해로운 이유 5문 5답

Q1. 문재인 정부의 경사노위는 이전 정부들과 다른가?

A. 국내외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는 지금, 정부는 지난 몇 달 동안 급격하게 친기업, 반노동 행보를 노골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 타협, 양보, 고통분담”을 공공연하게 촉구해 왔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아예 “양보할 것 없으면 경사노위 들어올 필요 없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가 노사정위에서 정리하고·파견근로제 찬성을 강요하던 것과 똑같다.

경사노위는 기존 법안을 개정해 간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가하더라도 본 위원회 18명 중 1명이 될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사노위에서 임금 억제, 노동시간 유연화 등 노동조건 양보를 얻어 내려 한다. 투쟁을 억제하고 계급협조주의도 강화하려 한다.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사 공동운명체 정신”을 강조했다. 사용자 생각도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1998년 노사정위 합의 경험을 봐도, 노·사·정 협조가 노동자들에게 상생을 가져다준

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 후 오히려 빈부격차가 더 벌어졌다.

Q2.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면 되지 않을까?

A. 노동조합이 투쟁을 해서 사측이나 정부를 협상장으로 끌어내는 것과, 사측이나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전제로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싸움을 말리는 곳”이라고 했다. 사회적 대화 참가자들은 상대가 투쟁에 나서면 대화(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로 이해한다. 즉, 대화를 하려면 투쟁을 접고 들어오라고 한다. 요컨대 투쟁과 대화의 병행은 동반 상승 효과를 내지 못한다. 지난해 6월 30일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 7만 명이 모인 직후, 김명환 위원장이 대통령과 만났다가 투쟁이 확대되지 못했던 것이 그런 사례이다. 지금도 경사노위 참가에 주력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악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Q3. 경사노위에 참가해야 최악이라도 막을 수 있는 것 아닌가?

A. 정부가 애초에 개악을 추진하지 않으면 될 일이다. 대화해서 보완책을 논의하자는 것은 개악을 하겠다는 말일 뿐이다.

현장 노동자들이 개악에 저항할 때, ‘너희 지도자들이 동의한 것이다’ 하고 말하면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비난하고 고립시키기 쉽게 만들려는 게 경사노위의 목적이다.

지금 경사노위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국민연금 개악,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권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다. 대체근로 허용, 점거금지, 단협 유효기간 연장 등도 논의된다. 사회안전망 개선안도 고용 유연화(쉬운 해고)를 위한 보완 조처 마련 수준이다. 그러므로 경사노위에 들어가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대정부 투쟁을 시작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다.

Q4. 경사노위에 참가하지 않으면 민주노총의 사회적 위상이 떨어지고 주변화되지 않을까?

A. 노동운동의 사회적 위상이 강화될 때는 대중 투쟁으로 조합원은 물론이고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지켜내거나 개혁 성과를 쟁취했을 때

이다. 1980년대 후반, 1997년에 그랬다. 민주노총의 노동개악 저지 투쟁이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으로 이어졌을 때도 그랬다.

민주노총이 ‘국민 민심’이라면 왜 1년에 10만 명이 넘게 조합원이 늘었을까? 정부는 왜 민주노총 출신 인사를 경사노위 위원장에 앉혔을까?

반대로 개악에 합의하면 위상이 약화되고 조합원들은 떠날 것이다. 1998년 정리하고 합의가 그런 사례이다. 2010년 스페인 노총은 쉬운 해고와 연금 개악에 합의해 줬다가 이듬해 벌어진 청년들의 운동에서 배척받았다.

Q5. 정부가 탄력근로제 등 개악을 중단한다는 조건으로 경사노위에 참여하면 어떨까?

A. 최근의 개악 쟁점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확인됐다.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문제 등도 경사노위 참여 판단의 기준 조건으로 언급돼 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며 보란 듯이 개악을 거듭해 왔다. ‘조건부 참여론’은 조합원들에게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지 못하고 혼란을 줄 뿐이다.

▶ 앞면에서 이어짐

사노위를 정부 정책에 개입해 사회 개혁을 이루는 수단으로 본다.

그러나 경사노위는 정부가 노동자의 불만을 부를 정책들을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 추진하려는 기구다. 국제적 경험을 봐도 노동자들은 일방적 양보를 강요받아 왔다. 온건한 개혁을 추구하는 국제노동기구(ILO)조차 이런 보고서를 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사회적 협약 체결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대신 조직이나 노동자의 이익과 권리를 방어하는 기본적인 노사관계 업무에 그들의 에너지와 자원을 집중시키는 것이 차라리 현명할 수 있다.”(ILO 보고서 2018. 10)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친기업·반

노동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고 2월 탄력근로제 강행마저 예고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마땅히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러려면 이간질에 맞서 단결을 추구할 줄 알아야 한다.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 모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방어해야 한다. 정부는 대기업·공공부문·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되도록 방관하면 세력관계가 노동계급에 불리하게 돼 열악한 노동자들도 불리해진다. ILO는 정규직 ‘과보호’가 공격받은 곳에서는 한결같이 비정규직 처지도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조직 노동자와 차별받는 사람들의

연대도 중요하다. 남녀 노동계급의 단결, 성소수자 방어, 이주노동자와 난민 방어 등이 그것이다.

경제 위기 시기에는 조건 악화의 책임을 노동계급 내부로 돌리게 만드는 지배자들의 이간질이 강화되므로 이런 단결을 잘 추구해야 투쟁을 잘 조직할 수 있다.

노동자 연대
문재인 편당 말고 경사노위 참여 말고 투쟁하라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wspaper.org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과 대정부 투쟁 결의 연서명에 동참합시다.

연서명 주소:
<http://bit.ly/경사노위참여반대>